

정책 · 입법 동향

- ◆ 본 정보지는 울산 북구의회에서 각종 부처 및 국내 연구기관 등의 최신 자료를 자체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 ◆ 의원님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울산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님의 전자메일을 통해 정기적(분기별)으로 제공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목 차

I. 정책 동향

- 1. 달라지는 법령·제도 1
- 2.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10
- 3. 과학기술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의 변화와 성인지적 정책과제 17

II. 울산 현안

- 1.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및 플랫폼 구축 필요 22
- 2.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32

III. 타 지자체 입법 동향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38

IV. 참고 법제정보

- 1.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소개(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 42
- 2.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지방공사의 정관 변경에 지방의회 동의 의무 부여) ... 47

V. 자치법규 Q&A 49

I. 정책 동향

달라지는 법령·제도

1.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규제 완화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농업인 주택을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농지법 시행령」 2024. 7. 3. 시행
-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업인 주택을 농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
 - *(신설) 농업인 주택을 농업 분야 내국인 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득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시설
 - ** (현행) 660㎡ 이하 → (개선안) 1,000㎡ 이하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출처 : 정책브리핑)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7. 26. 시행
 -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 전환 목표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마련해 농업인과 기업이 주도적으로 농업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종합지원 추진체계 구축
 - 지역별 특화 농산물의 스마트농업 생산과 연관산업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투자 확대, 기후대응 병충해·물관리 등 인공지능(AI)·데이터 솔루션의 현장 확산을 추진
- 스마트팜 기업의 창업부터 수출까지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투자유치, 판촉(마케팅) 지원 강화
 - 수직농장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 및 산업단지 등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성과가 우수한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선정하여 기자재·서비스 분야까지 사업 범위 확대

3.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출처 : 기획재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2024. 2. 6. 제정, 2024. 8. 7. 시행)

* 제5조 및 제17조(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4. 2. 7.시행(3년 유예)

- 개식용 소비문화를 변화시키고 관련 영업의 전·폐업을 유도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개식용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 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 9월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한 자

4.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출처 : 정책브리핑)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 9. 14. 제정, 2024. 9. 15. 시행)

-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음.
-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임.

5.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출처 :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2024. 9. 30. 시행)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송무, 등기(후견등기는 제외), 공탁, 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 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 행	개 정
발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방문 발급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한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통당 6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 시 무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 중 1인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부'와 '모' 모두 면제
신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6.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 (출처 :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일부개정(2024. 7. 10. 시행)

-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이동명령·견인 가능
- 소유자, 차량 견인 24시간 이후 미인수시 차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인수 시 차량견인료+보관료 납부
- 소유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 후 매각·폐차 가능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2024. 1. 9.>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참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금지(2024. 9. 20. 시행)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 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3. 19.]

[중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4. 3. 19.>]

[시행일: 2024. 9. 20.] 제6조의3

7.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시행 (출처 : 정책브리핑)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총 8회 제공**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1 대면)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복지로) 신청 : 2024년 10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 서비스 가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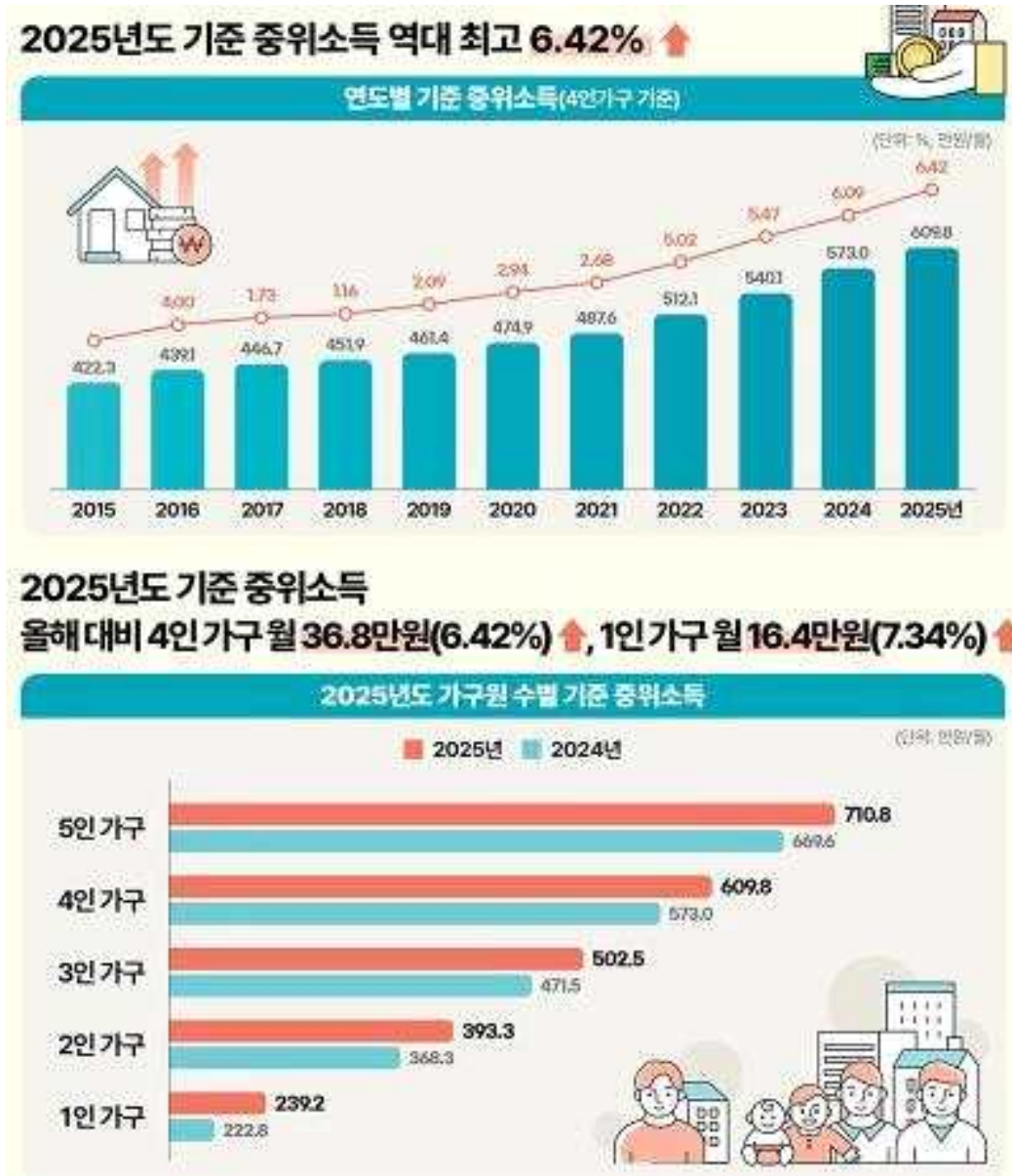
- 서비스단가 :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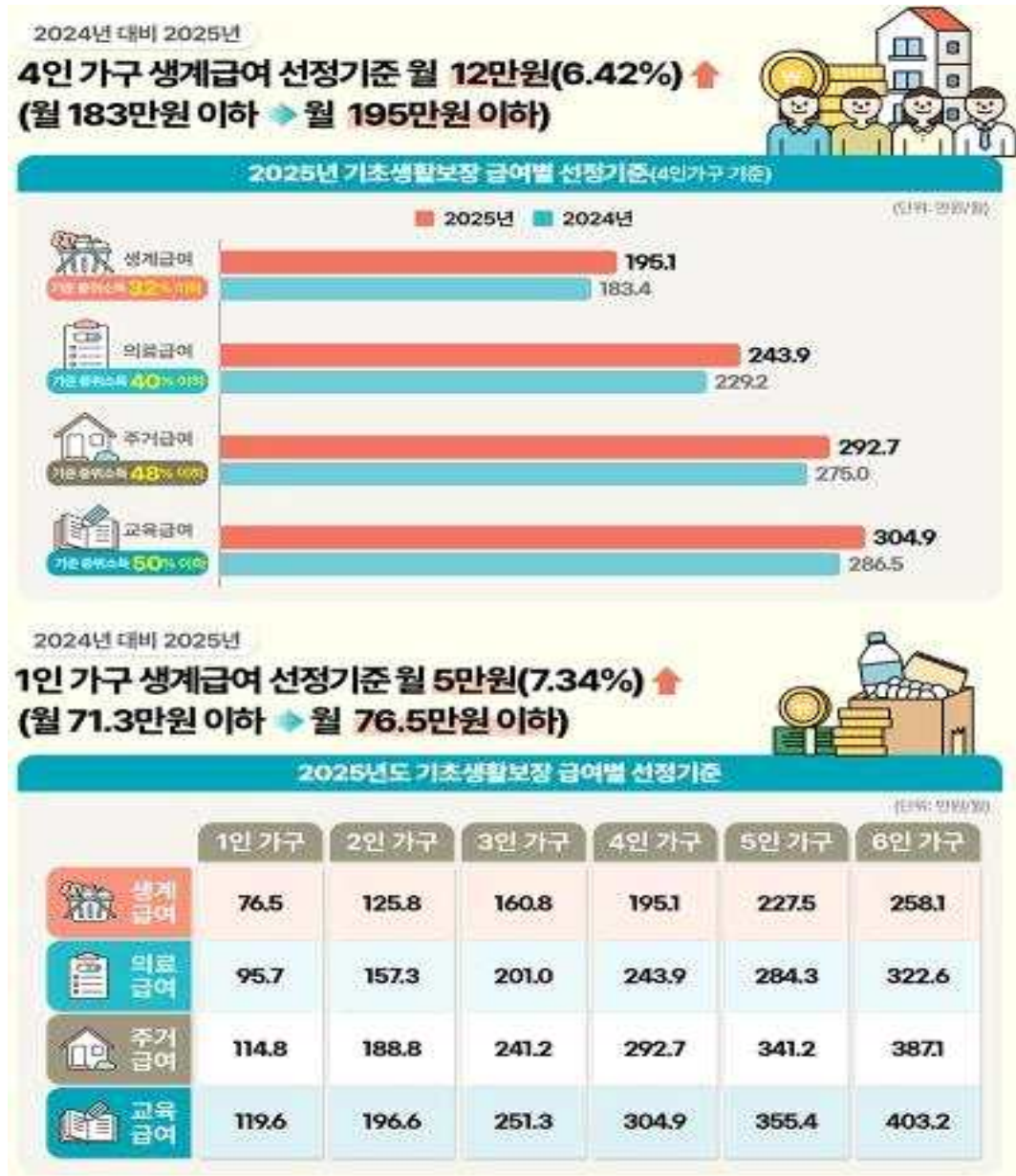
8.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등 확대 (출처 :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¹⁾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 심의·의결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맞춤형 급여체제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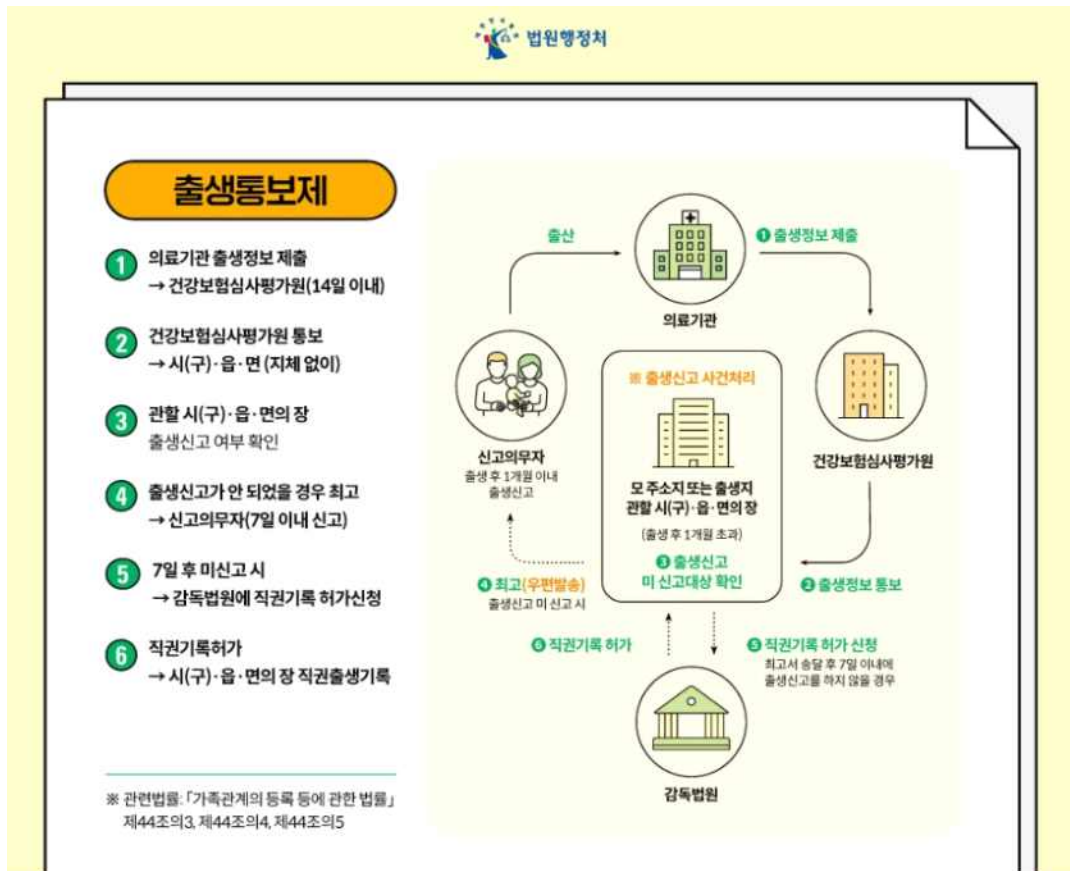
1)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



-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 2025년에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
-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 1287원, 의료급여 243만 9109원, 주거급여 292만 6931원, 교육급여 304만 8887원 이하임.
- 의료급여는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을 상향
- 생계급여 수급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도록 자동차 재산을 소득에 미반영하는 기준을 현재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내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내년부터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예정

9.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7월 19일부터 시행 (출처 : 대한민국법원)

- 출생통보제 :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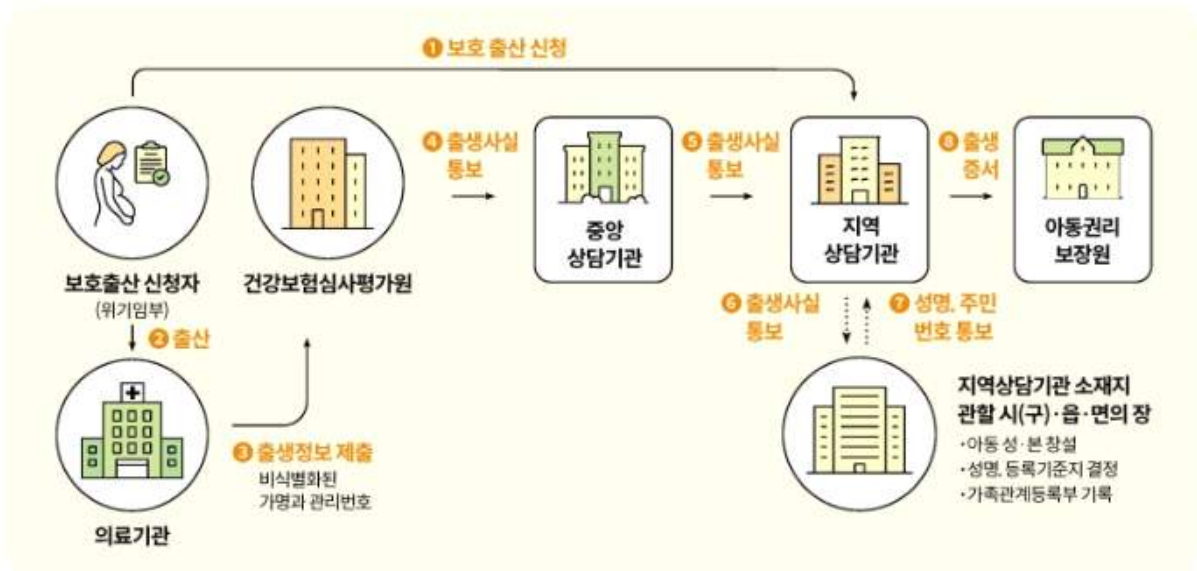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의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한다)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평가원은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출생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보호출산제** :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제9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이하 본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비식별화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 농수산물 ※ 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수산경제

1. 개정 배경

○ 과잉 포획 및 환경 훼손

- 비어업인들에 의한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채취가 수산자원의 과잉 포획과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였고 특히, 어획량 제한 없이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함.

○ 불법 활동 증가

- 최근 레저인구 등의 증가로 레저인이나 낚시인 등 비어업인들의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려 어업인들과의 갈등·대립이 심화되고 몸싸움, 고소, 고발 등 일촉즉발의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함.
- 바다에서 맨손으로 수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일컫는 ‘해루질’은 순수한 레저의 수준을 넘어 수중드론, 스쿠버 장비, 작살 등을 이용한 불법이 난무하고, 해삼, 소라 등을 키우는 마을어장까지 침범해 지역 어업인들과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취미나 오락 목적에서 전문화, 상업화로 변질되는 상황임.(※ 출처 : 전북일보)
- 비어업인들이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함에 따라 불법 어획 및 상업적 판매와 같은 비합법적 행위가 증가했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법적 및 관리의 공백

- 기존 법령에서 비어업인에 대한 수산자원 포획·채취 규제는 미비하였으며, 이로 인해 관리 감독의 공백이 발생

해루질이란

- 주로 야간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 사전상의 의미로는 야간에 한다고 되어 있으나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낮에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도 포함.
- 맨손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으나 완전히 맨손은 아니고 족대, 라이트, 호미 등의 보조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2. 법 개정의 필요성

○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

- 비어업인은 주로 취미나 생계 보조를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포획으로 인한 특정 어종의 감소와 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함.
- 일부 비어업인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산자원을 채취하고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됨.

○ 사회적 논의 및 합의

-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규제 필요성이 대두됨.
- 어업인들은 기존 법령의 미비점으로 인해 자신들의 생계와 지역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지자체에 규제 강화를 촉구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 포획·채취 허가제 도입

-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조건과 절차를 명시함.

○ 어구 및 수량 제한

-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있는 어구의 종류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처벌 강화

- 비어업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안됨.

(위반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비어업인은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됨(위반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기대효과

- 비어업인과 어업인 간의 갈등을 줄이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지역별로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각 지역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

의정활동 착안사항

☞ 수협중앙회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촉구

- 수협중앙회는 관련법 개정 시행에 따라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을 위한 건의서'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에 전달함.
-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존을 목표로 지자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반기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충남도의회, '비어업인 어업활동 효율적 제한 정책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 어업인 생계 보호와 해양레저 안전을 위한 상생 방안을 위해 어업인, 관광업자, 수협 관계자와 해경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포획·채취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함.

☞ 강원도,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례 지자체 최초 제정

- 전국 최초로 일반인(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행위인 일명 '해루질'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 (※ [출처 : 연합뉴스](#))

☞ 시·도 지자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조례 제정 준비

- 강원도에 이어 다른 시·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제주도는 9월 조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 제정 움직임은 어업인의 생계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제주일보](#))

☞ 울산 어업인·비어업인 간의 갈등 해소 대책 마련 필요

- 지난해 울산해경에 접수된 불법 해루질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1건에 달함.
- 울산은 마을어장 간 간격이 좁아 비어업인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특히 야간 해루질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채취 가능한 마릿수 제한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울산시도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 등의 제한)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이하 “비어업인”이라 한다)는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도의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비어업인이 알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비어업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비어업인은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채취기준) ①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어구·방법에 관한 기준: 다음 각 목의 어구나 방법만 사용할 수 있다.

가. 투망

나. 뜰채(쪽지), 반두(쪽대), 손들망

다. 외줄낙시(대낙시 또는 손줄낙시)

라. 가리, 통발

마. 낚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집게, 갈고리, 호미, 삽

사. 손

아.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

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로서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각각 1미터(원형 형태인 경우에는 지름 50센티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도구

2. 장비에 관한 기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수중레저장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

- 가. 수경
- 나. 숨대롱
- 다. 잠수복 및 잠수모
- 라. 오리발
- 마. 수중칼
- 바. 호루라기

②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수량·방법의 제한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가. 동일한 종류의 어구를 동시에 1인당 1개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 나. 전기, 압축공기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않을 것
- 다. 어획량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유인하는 집어등(集魚燈)을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야간에 시야 확보를 위하여 휴대용 전등은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휴대용 전등의 밝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조, 제8조 및 제40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포획·채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해당 시·도의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특성, 자원량, 수산자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것
- 2. 어초(魚礁)·해조장(海藻場) 설치, 수산종자 방류 등 수산자원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 3.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현황, 해양레저 현황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형태 및 사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포획·채취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포획·채취 기준이 적용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포항해경, 수산자원 보호 불법 해루질 단속

**포항·경주 해안가 14건 적발
과태료 부과·중대위반 검송치**

경북 포항·경주 해안가에서 불법 해루질이 기승을 부려 관계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포항·경주 인근 바다에서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은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41건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 조치했다.

단속 유형으로는 비어업인이 불법

어구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12건과 마을 어장 내에서 전복 80피 등을 잡은 1건, 잠수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해삼 등을 잡은 1건 등이다.

해경은 적발한 사례를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해 처벌받도록 할 예정이다.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일컫는다. 맨손이나 호미, 집게를 이용해 자연산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지만,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거나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비어업인의 단순한 취미·레저활동이지만, 최근에는 해루질이 상업적으로 변질하고 있다. 마을 어장 침범은 물론이고 갯 살포한 치패부터 종패까지 무분별한 포획·채취로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 어업인의 소득원인 전복 등 수산물을 채취해 어업인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해루질은 근절돼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지속해서 홍보·계도하는 한편 불시에 단속해 실효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한국일보

2023년 05월 24일
08면 (기획)

“주꾸미 새끼까지 싹 뜯어가” 늘어나는 낚시인구에 어민들 울상

**“어종 자원 훼손할 만큼 규모 커져”
낚시배 총허용어획량 적용 요구
해수부 “집게 올해 시작, 추후 논의”**

항구를 떠날 때 만선을 바라는 건 어민만이 아니다. 1,000만 명 돌파를 앞둔 낚시인 역시 마찬가지일 터다. 그런데 배에 물고기를 매번 가득 싣고 돌아올 수 있는지는 어민과 낚시인이 다르다. 주요 어종에 대한 어획량 상한선이 있는 어민과 달리 낚시인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아서다.

이에 낚시인이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이 잡는 어종의 양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업인,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 발굴단이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

낚시배에도 총허용어획량(TAC)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한 배경이다. 낚시배 TAC를 실시하면 해당 어종에서 하루 동안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은 한도가 생기게 된다.

낚시배 TAC 적용은 낚시인 규모가 어종 자원을 훼손할 만큼 커졌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8년 850만 명이던 낚시 인구가 올해 973만 명, 내년 1,012만 명까지 불어난다. 특히 서해 주꾸미, 동해 문어의 경우 일반인의 낚시 어획량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군산 어민들은 ‘1인당 1일 최대 포획량 설정’ 등 낚시로 인한 주꾸미 남획 방지책을 정부에 제안했다. 동해에선 지난해 4월 문어잡이 어선들이 문어 낚시배를 에워싸는 일도 벌어졌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TAC 어종인 고등어는 2월 기준 어선 어획량이 2,236톤인 반면 낚시로 잡은 양은 2톤에 불과하다. 갈치 역시 어선, 낚시배 어획량이 각각 4,513톤, 5톤으로 격차가 크다. 낚시가 어민의 어획활동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해수부는 낚시배 TAC를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마침 국회에서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법적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집게하기 시작한 낚시배 어획량 통계가 쌓이면 이해관계자들과 TAC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생계 위협” vs “해녀 갑질”... 거세지는 제주도 ‘해루질’ 갈등

(어촌계 해녀들)

(물집 동호회)

마을어장이란 금지에도 수년째 공방

얕은 바다에서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해산물을 잡는 ‘해루질’을 놓고 제주 해녀와 해루질 동호인들 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제주도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야간 해루질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지만, 과태료 부과 건수는 이듬해 더 늘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바다에서 지난 28일 만난 해녀 정모씨는 “지난해 동호회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일로 다음 주 경찰조사를 받으려 간다”며 “해루질 얘기는 지긋지긋하다”고 화를 냈다. 정씨는 “밤마다 해녀들이 불청객을 시고, 바다 앞 어촌계 건물에 CCTV까지 달았다”며 “제주도가 해녀가 물집하는 마을 어장이 아닌 배를 대는 어항구역에서만 해루질을 하도록 고시했지만, 동호인들은 어항구역으로 들어가 마을어장으로 나온다. 해결은 불리도 게도만 하고 보 내니 다 소용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1월 귀덕리 바다에서는 해녀와 동호인들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다. 해녀들이 해루질을 하고 나오는 낚시 동호인들을 발견하고 이들이 잡은 수산물 10마리를 꺼내 바다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해결까지 총동원했지만 충돌은 수습본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해녀와 동호인 이 함께 바다로 떨어지자 병행으로 야송되기도 했다. 동호인들은 자신들이 잡은 수산물을 빼앗겼고 물에 손을 댔다며 해녀들을 고소했다.

귀덕리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를 포괄해도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도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루질 동호회원은 2020년 이후 크게 늘었다. 연안예선의 자민 생촌기을 담은 방송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때마침 코로나19 확산으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들이 마을어장에서 물집을 마치고 운으로 나오고 있다(왼쪽). 제주도가 2021년 4월 마을어장에서 비어업인의 야간 해루질을 제한하자 5월 제주도의회와 회원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오른쪽). 가운데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바다 앞에 세워진 외부인의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표지

해녀를 불침번·CCTV도 소용없어
작년엔 해녀-동호인 물리적 충돌도
어촌계 독점 마을어장이 전체 95%
동호회 “저 배해달라” 아우성
어촌계 “생계 달랠-나출 수 없어”
국회 입법 개정나섰지만 성과 미지수

연의 수산물 채취를 제한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그동안 해루질을 수중 레저활동으로 판단하고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루질 동호인이 늘고, 이 중 일부가 맨손어업으로 등록해 잡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녀와 동호인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제주도가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야간 해루질을 금지한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고시에 따라 배가 오가는 어항구역에서는 야간 해루질이 가능하지만 해녀들은 실제 해루질이 어디에서 이뤄지는지 알 수 없다며 해루질 자체에 격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귀덕리 바다 몸싸움도 어항구역에서 나오는 동호인과 해녀 간에 벌어졌다. 일부 어촌계에서는 야간에 배를 대러 들어오다 어항구역에서 해루질을 하던 동호인과 충돌해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어주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해루질 도구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점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해녀들은 탐조등의 경우 배터리를 무제한에 제한이 없고, 잠수복도 해녀 잠수복보다 많아 동

호인들이 바다 깊이 잠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지적한다. 해녀들은 “밤은 레저라고 하지만 온라인에 아들이 올린 판매 글을 보면 포획한 수산물의 양이 상당하다”며 “취미라고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해루질 동호인들도 불만이 크다. 야간 해루질이 어항구역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데다, 규정은 준수해도 해루질을 나갈 때마다 해녀들이 다물을 끌어온다는 것이다. 도내 해루질 동호회 관계자는 “지금도 해루질을 갈 때마다 해결이 출동한다”며 “마을어장이 제주 바다의 95%인데 야구보다 어촌계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촌계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권리가 2년 이상 재대로 이뤄지지 않은 수산물은 자연산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종래사업은 제주도기에 산을 지원하는데 해녀를 어촌계만 보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어장 내 해녀들이 작업하지 않는

구역은 더 개방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처럼 해루질을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다. 최근 국회에선 각 지자체가 지역 어촌에 맞는 해루질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해루질 허용 범위를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마을 어장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확보해 온 어촌계와 바다가 공공재임을 강조하며 해루질 구역 확대를 요구하는 동호인 간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주도 어촌계연합회 관계자는 30일 “마을어장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촌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독점적 이용이 허용되는 곳이다. 법 개정 취지도 해루질로부터 지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레저든 업업든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관리하는 마을어장을 내어줄 수는 없다. 조만간 도내 어촌계장들이 모여 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성임 기자 moon125@kmb.co.kr

비어업인 불법 해루질 적발땀 벌금폭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시행

비어업인 포획 장비 등 제한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도 가능

마을어장 불법 수산물 채취 등

레저객-어업인 갈등 해소 기대

그동안 비어업인(일반인)들의 불법 ‘해루질’로 지역 어민들이 속앓이를 해 온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 울산안바다에서 비어업인이 정해진 어구 또는 방법을 위반 하다가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으로 올 여름부터 비어업인의 해루질 사용 어구 등에 제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 년간 반박해 온 비어업인들과 어민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8일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일상적 장비’로 제한한다. 또 단순 레저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21일 울산수협에 따르면, 지난 2월 새벽시간 북구의 한 어촌계 마을어장

에서 전문 장비를 착용한 3명의 다이버가 양식 중인 전복을 채취하려다 지역 주민에게 발각됐다.

또 지난 4월 북구 또 다른 어촌계 마을어장에서도 같은 차량의 레저객 3명이 수산자원법상 채취가 불가능한 크기의 돌문어와 소라 등을 수확하다가 지역 어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어업인 A씨는 “금어기인데도 망태기를 가져와 100kg, 200kg씩 채취해 가는 경우도 봤다”며 “대부분 야간에 이뤄지다 보니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울산의 해루질 신고 사례 대부분은 레저객들이 야간에 전문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전복과 소라 등을 채취하다 지역 어민들에게 발각돼 신고로 이어

진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울산해경에 접수된 불법 해루질 관련 신고 건수는 총 61건에 달한다. 이와 관련, 어민들은 “신고하면 경찰서에 방문해 몇 차례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생업 때문에 그냥 주의만 주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아마 실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울산은 마을어장 간 간격이 좁아 비어업인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이들의 주 채취 대상이 되는 전복과 소라의 경우 지자체와 수협 등에서 울산 어업인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뿌려준 종패인 경우가 많아 자칫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어촌계에서는 대부분의 해루질이 어민들의 시선을 피해 야간에 진

행되는 경우가 많아 야간 해루질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채취 가능한 마릿수 제한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를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충남은 7월 중 조례 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울산과 부산,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하반기 조례 제정을 목표로 초안을 작성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다 지자체의 제정 동향과 관계자들의 입장을 수집해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용기자 k2291730@silbo.co.kr

과학기술변화에 따른 노인돌봄의 변화와 성인지적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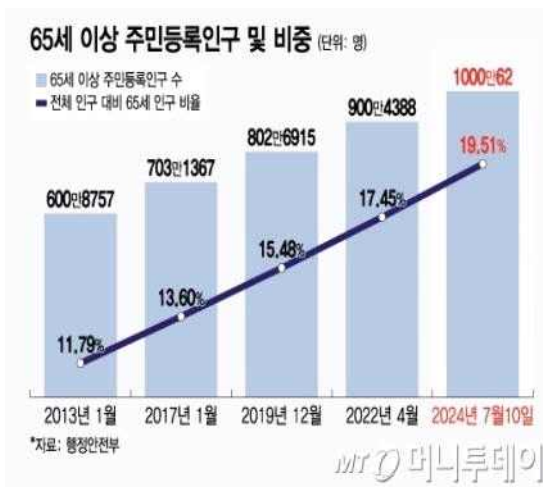
※ 소관부서 : 노인장애인과 ※ 출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현황 및 분석

○ 우리나라 65세 인구, 1000만 명 돌파(출처: 머니투데이)

- 7월 10일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음(인구의 19.5%)

유엔(UN·국제연합)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우리나라는 올 하반기에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 2031년 사회복지 인력 대란 온다...

최대 58.3만 명 부족(출처: 조선비즈)

-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8년 뒤인 2031년 사회복지 인력이 최대 58만 3000명, 인접 산업인 보건업 종사자도 최대 44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 상황이 우려됨.

○ 일본, 노인 돌봄 영역 과학기술 도입

- 일본 정부는 개호²⁾분야의 로봇산업 육성, 개호인력의 업무부담 경감,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삶의 질(QoL) 향상, 개호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대응을 위해 2010년 ‘신성장전략’ 발표 이후 개호분야에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23년 일본 정부는 로봇기술을 활용할 개호 관련 ‘중점분야’로 이송지원(장착형, 비장착형), 이동지원(옥외용, 옥내용), 배설지원, 지키미·커뮤니케이션(재가용, 시설용), 입욕지원, 개호업무 지원의 6개 분야를 특정하고, 각 분야별로 개발할 로봇 개호기기를 설정하여 총 13가지의 개호로봇 실용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개호(介護) :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가 목욕, 배설,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뜻함. 일본에선 병든 사람을 돌보는 간병과 개호(돌봄)를 구분해서 씀 (출처 : 경향신문)

2. 시사점 및 제언

○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개호로봇을 활성화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실제 개호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호기기가 많고, 현장의 요구와 로봇의 활용성이 부합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 사용자인 노인, 가족돌봄자, 돌봄제공자의 참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기술개발과 활용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채널 및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함.

○ 기술기반 노인돌봄 활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유관 정책 연계

- 국내 지자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서지원로봇의 경우 ‘Wi-fi’ 등이 갖추어져야 활용 가능한데 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급되는 경우도 있음. 기술활용을 위한 인프라 부족 해결 등 기술기반 돌봄을 활용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노인돌봄 정책과의 정비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의정활동 착안사항

☞ 돌봄로봇 확대 위한 예산 확보 노력

- 울산 북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해 울산에서 처음으로 재가치매환자에게 AI 돌봄 로봇 30대를 제공해 서비스 대상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음. 올해는 AI 돌봄 로봇 10대와 로봇 조작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AI 돌봄 인형 10대 등 모두 20가구에 AI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

북구치매안심센터가 AI 돌봄 로봇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결과, 주관적 기억 감퇴(SMCQ) 평가 0.7점 감소,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K) 1.1점 감소, 치매 노인 삶의 질 척도(GQOL-D) 3.6점 증가로 AI 돌봄 로봇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돌봄 로봇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함.

☞ 정서 지원 로봇 외 이송, 이동, 입욕, 배변 지원 로봇 도입 모색

- 국내 지자체의 돌봄 로봇은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로봇이 대부분으로 돌봄 인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송, 이동, 입욕, 배변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편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태가 예견되는 만큼, 업무 경감을 위한 보조 로봇 활용 등이 앞서 고려되어야 함.

☞ 디지털 취약 한계 극복을 위한 교육 필요

- 노인 돌봄 서비스에 로봇 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 활용에 대한 교육 제공도 매우 중요함. 로봇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노인을 비롯해 업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돌봄 인력까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독일, 간병인 업무 덜어 주는 로봇 개발 한창” (출처 : KBS)

아헨공과대학교 연구진이 아헨대학병원과 함께 개발한 로봇.

사전에 입력된 환자 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어느 부위를 만져야 하는지 자동으로 파악해 조심스럽게 누워 있는 환자를 옆으로 눕혀주거나 몸을 들어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환자들을 돌려 눕히고, 앉히고, 다시 눕히고 하는 일도 간병인들에게는 적잖은 육체적 부담이 되는데 로봇이 이 일을 담당.

고령 인구 증가로 간병인 수요도 급증함에 따라 독일에선 2040년이면 무려 70만 명 가까운 간병인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양한 업무 보조를 위해 로봇을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中 상하이시, 노인 돌봄 로봇 개발 촉진 정책 내놔” (출처 : 로봇신문)

최근 상하이시 정부는 '상하이시 노인 돌봄 기술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방안(2024~2027)'을 발표하고 노인 돌봄을 위한 다양한 로봇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이번 방안에 따르면 상하이시는 6가지 노인 돌봄 유형을 제시하고 ▲전자 줌 안경 및 기타 시각 보조 장치 ▲지능형 추적 휠체어 및 심근경색 모니터링용 웨어러블 기기 ▲무감각 수면 호흡 모니터 등 헬스케어 서비스 ▲재활 로봇 및 외골격 로봇 등 재활 보조 상품 ▲무감각 추락 방지 모니터링 등 안전 모니터링 상품 ▲지능형 생체 공학 로봇 애완 동물과 반려 로봇 등의 돌봄 서비스 상품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음.

□ “미국, 아마존 알렉사 낙상사고 예방” (출처 : 경인일보)

미국 아마존의 원격 AI '알렉사 투게더'는 벽걸이 센서, 목걸이 등을 통해 낙상 사고를 감지함. 또한 이용자의 건강상태와 약 복용 여부를 질문하면서 건강데이터를 분석한 '케어 엔젤' 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미국에 도입됐음.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본인들만의 AI 운영체제를 도입하면서 벽 센서, 전등 등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건강 관리 시스템도 마련됨.

경인일보

2024년 06월 18일
03면 (종합)

소소한 말벗 넘어 든든한 케어까지... ‘지자체 관심사’

이슈추적

복지새 패러다임... AI 노인돌봄 사업 확산

경기도의 AI말벗서비스를 시작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노인돌봄사업은 전국으로 확산중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AI를 기반으로 낙상 사고방지·약물복용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국내 AI 기반 돌봄 서비스 역시 그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역시 최근 ‘경기노인 AI+돌봄’ 추진계획을 통해 AI를 통한 예방적 돌봄 체계 구축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7월부터는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움직임 감지, 심혈관 건강 체크, 차제자가 검사 등 ‘늘어난 AI 케어’ 사업도 지원한다. AI 스피커로 노인학대를 방지하는 ‘AI 어르신 든든자키퍼’ 사업 역시 7월부터 시행된다.

■ 전국 곳곳에서 AI 돌봄 체계 구축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의 필요성이 커져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노인돌봄사업에 AI를 전면적으로 도입

경기도, 예방적 체계 구축 목표

네이버와 ‘클로바...’ 협약 80여곳

아마존·구글 등 자체 시스템 마련

“해의 상호작용 서비스 도입될 것”

입하고 있다.

경기도의 AI말벗서비스는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통해 ‘클로바 케어콜’로 운영되는데 네이버와 협업한 지자체는 80여곳에 달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안부확인, 투약안내 등 예방형 소통이 가능한 ‘반려로봇’을 지난해 430대 보급했으며 올해 50대를 추가 지원한다.

대전광역시에서는 AI 돌봄 로봇을 도입해 노인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돌봄 로봇은 센서로 인근 5m 이내 사람 움직임을 확인하고 호흡, 체온 등을 감지해

경기도 시·군·구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명	내용
AI 노인말벗 서비스	안부 확인이 필요한 65세 이상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이 약 3분간 안부 전화
늘어난 AI케어	휴대전화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
AI어르신 든든자키퍼	확대된 노인의 재학대 위기 감지해 노인보호전문기관 긴급 호출

전국 AI돌봄 체계 사례

지역	서비스	내용
서울	AI 반려 로봇	안부 확인, 투약 안내 등 예방형 소통
대전	AI 돌봄 로봇	센서로 인근 5m 이내 사람 움직임 확인, 호흡, 체온 등 이상 여부 파악
경북 구미	AI 스피커 통합돌봄	지역 소식 안내, 투약 안내 등 말벗, 위기 징후 감지해 관계 센터 신고

이상 여부를 항상 살펴다. 대전시는 올해 돌봄 로봇을 5개 자치구에 200대씩 총 1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해외도 복지분야 AI 도입, 국내도 확대 전망

미국 아마존의 원격 AI ‘알렉사 투게더’는 백열이 센서, 목걸이 등을 통해 낙상 사고를 감지한다. 또한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약 복용 여부를 질문하면서 건강 데이터를 분석한 ‘케어 연젤’ 서비스는

지난 2016년부터 미국에 도입됐다.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이 본인들의 AI 운영체제를 도입하면서 백 센서, 전동 등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건강 관리 시스템도 이미 마련됐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는 국내에 AI 기반 돌봄사업은 시작 단계라면서도 해외 기술들이 들어오면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미국 대한민국은 도입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나리오에 기반한 일방향 소통이었다. 앞으로는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대로 AI가 일러주거나 약 챙겨 먹는 시간을 알아서 말해주는 등 이용자와 상호작용하는 해외의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될 것”이라며 “현재 네이버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 형태의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어 AI 기반 서비스는 확대될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아주경제

2024년 03월 07일
20면 (수도권)

말벗하고 119도 부르는 반려로봇... 어르신 건강 돌본다

서울시, 스마트돌봄 본격화

홀로사는 노인에게 50대 추가 지원
요양원엔 배설케어로봇 보급 확대
경로당 105곳엔 스마트홈 시스템

반려로봇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말벗이 돼 주고, 쓰러짐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자동 연락해준다. 또 로봇은 움직이기 힘든 어르신의 배변 처리는 물론 세정까지 자동으로 도와준다. 늘 적적했던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AI) 로봇이 바둑 상대가 돼 주고 대국이 끝나면 바둑알도 정리해 준다.

서울시는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인공지능(AI)·로봇·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기

로 확대해 노인 돌봄 공백을 메우고 더 정밀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시는 돌봄이 절실한 홀로 사는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반려로봇’을 지난해 430대 보급했으며 올해 50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안전관리기기를 통한 모니터링도 지속한다.

움직이기 어려운 위상환자의 배변과 세정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배설케어 로봇 2대도 도입한다. 현재 해당 기기는 서울 시립요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후 하반기에 11개 요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재빨리 돕는 로봇은 4개 요양원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5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착용 시 최대 15kg의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웨어블로봇’도 10대 공급돼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어



스마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스마트 테이블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르신의 풍성한 여가활동을 돕는 ‘스마트복지관’도 개관한다. 시는 노년·도봉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2곳을 오는 5월과 7월에 각각 ‘뉴 스마트 시니어 플레이스’ 스마트 웰시 라운지로 재단장을 문을 연다.

‘스마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다양한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배움터, 스마트놀이터, 스마트건강터 등으로 구성된다. 각 공간에는 두리향상 콘텐츠를 탑재한 돌봄로봇, 전자책판과 태블릿 PC를 이용한 디지털로잉(그림그리기), 다양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스마트테이

블 등이 설치된다.

11개 자치구 105개 경로당은 ‘스마트 경로당’으로 탈바꿈한다. 관리인이 없어 안전성 취약한 경로당 특성을 반영해 센서를 활용한 전가가스·수도 사용 제어, 화재나 누전 경보기 작동, 출입 감지 등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홈 시스템’을 보급한다. 이 밖에도 시는 디지털 교육, 화상플랫폼 연결 등을 지원하는 인력인 ‘스마트경로당 동행단’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찾아가는 디지털 체험버스’ 운영도 준비 중이다. 체험 버스는 올 하반기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는 시설 등 주요 밀집 지역 50곳을 순회할 계획이다.

정성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초고령 시대에 돌봄 영역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어르신 안전과 건강 유지는 물론 풍요로운 여가생활을 지원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접목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



반려로봇 ‘다솔이’

II. 울산 현안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및 플랫폼 구축 필요

※ 경제일자리과 ※ 출처 : 울산연구원

1. 현황 및 분석

- 정부·울산, ‘주민의 자발적 지역문제 해결’ 위해 다양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
 - 행안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부, 해수부, 문체부는 2003년부터 지역사회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지역공동체기반조성사업, 사회적기업·마을기업육성사업, 생활문화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
 - 울산은 2017년 12월 28일 ‘울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
 - 울산시·기초지자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구·군 공모사업’, ‘마을계획단 공모사업’,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공모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마을공동체 정의와 목적>

- 정의 : 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 목적 :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음.

- 지난 5년간 사업 참여 단체 2배 증가...마을공동체사업 인지도·참여의사 상승

[표] 울산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단체 수 추이

구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중구	41	13	11	6	6	5
남구	62	19	16	12	8	7
동구	54	13	11	12	9	9
북구	76	20	15	13	15	13
울주군	104	21	20	28	24	11
계	337	86	73	71	62	45

※ 출처 : 구·군 내부자료

- 2019~2023년까지 구·군별 마을공동체사업 참여단체 수는 337개로 지난 5년간 당해년 참여단체 수가 약 2배 정도 증가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마을공동체사업 인지도는 ‘알고 있음’ 응답률이 2019년 38%에서 2023년 53.9%로, ‘참여할 의사 있음’은 동년 68.2%에서 72.9%로 증가
- 울산형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로는 울주군 ‘청춘포레스트 마을만들기’, 중구 ‘내손으로 그리는 성안 옛 길’, 북구 ‘지구에서 지구 지키기’, 동구 ‘공동육아와 마을을 잇다! 온 마을이 놀이터! 우리가 만드는 마을 축제!’가 있음.

○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협력·소통 위한 공간·정보 공유’ 어려움 호소*

- 행정기관과의 소통 및 지원,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역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 주민화합 및 소통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단체 중 43개 단체가 사무실 보유현황에 대해 응답한 결과, 사무실이 없는 단체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 없음(45.8%) > 자가(18.8%) > 타인사무실(14.6%), 단독임대(14.6%) > 공동임대(6.3%)

*자료 : 울산연구원 자체 조사 결과

2. 시사점 및 제언

○ 울산 마을공동체 협력·소통 활성화 위한 ‘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필요

- 해당 지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참여자들이 상호 참여·협력·소통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공용공간을 대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단기적으로 야간, 주말 시간 등 유휴 공공시설이 다수 발생하는 시간대를 활용해 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울산시 및 기초지자체 단위의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은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이 사업 기획 및 추진, 주민 중심의 마을 문제 공론을 위한 사무공간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주민, 활동가, 실무자 등의 학습체계를 구축·제공하는 마을공동체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

○ ‘울산 마을공동체 플랫폼(안)’ 구축 통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를 전파해 신규 마을공동체 기획을 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울산지역 마을공동체 사업 참여자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울산 마을공동체 플랫폼(안)’ 구축이 필요

의정활동 착안사항

☞ 부천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마을 온돌’ 운영

- ‘마을 온돌’은 2023년 ‘경기도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LH 매입임대주택 무상 임대와 기존 도시재생센터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상동과 도당동에 각각 조성되어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대관과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공간으로 운영됨. (※ [관련기사](#))

☞ 광양시, 마을공동체 대표자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

- 마을공동체 대표자와 마을활동가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해 참석자 네트워킹, 광양시 마을공동체 소개, 마을공동체 발전방안 제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함.
- 광양시는 2016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 마을공동체 참여 단체 수는 48개임.

☞ 울산 동구, ‘마을활동가’ 양성 및 ‘화정마을관리소’ 운영

- 2023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함.
양성과정은 마을활동가의 이해 강의 및 사례, 역할찾기 워크숍, 역량키우기 워크숍, 네트워크 활동 등 총 4회로 진행, 24명이 수료함. (※ [관련기사](#))
- 화정마을관리소는 2023년 12월 개소해 현재 시범운영 중임.
마을순찰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간단 소수리, 공구 대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 (※ [관련기사](#))

☞ 태안군, ‘마을기자단’ 운영

-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3년간 마을기자단 양성에 나섰으며, 2020~2022년 1~3기 교육을 통해 20명을 기자로 위촉함.
마을신문 ‘어우렁더우렁 태안’은 2020년 12월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관내 190개 마을에 연 4차례 배부되었고,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음.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마을공동체의 회의 및 활동 편의를 위해 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점공간 마련
- 마을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제공
- 활동가들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 형성, 마을공동체 활동 기록 및 공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마련

□ 시 추진사업 : 13개 부서, 40개 사업(자체 7개, 중앙부처 33개)

부 서 명	자체/중앙부처	사 업 명	비고
자치행정과 (5건)	자 체 (3건)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사업	계속
		구·군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계속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계속
	행정안전부 (2건)	지역공동체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활동지원사업	계속
		마을공방 육성사업	계속
기업지원과 (4건)	자 체	마을기업 아카데미 운영	계속
	행정안전부 (2건)	마을기업 육성사업	계속
		마을기업컨설팅 등 지원사업	계속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지정 및 육성	계속
인구청년담당관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활성화 사업	계속
안전총괄과	자 체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계속
인재교육과	자 체	울산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계속
농축산과 (2건)	농림축산식품부 (2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속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계속
해양수산과 (5건)	해양수산부 (5건)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계속
		주전향 어촌뉴딜 300사업	계속
		당사향 어촌뉴딜 300사업	계속
		우가향 어촌뉴딜 300사업	계속
		송정향 어촌뉴딜 300사업	계속
도시재생과 (11건)	국토교통부 (11건)	군계일학, 학성	계속
		청·장년 어울림 (문화복지) 혁신타운	계속
		다함께 어울림, 신정3동	계속
		도심속 생활문화의커, 골목으로 이어지다	계속
		남목 삶과 도시의 RE DESIGN	계속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계속
		사람의 장, 헌양의 귀환 (舊 사업명 :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어라)	계속
		따뜻한 이웃과 새로움이 있는 원도심 溫산, 덕新리	계속

부 서 명	자체/중앙부처	사 업 명	비고
도시재생과 (11건)	국토교통부 (11건)	울주군 서하마을	계속
		울주군 하대마을	계속
		울주군 대현마을	계속
복지인구정책과 (2건)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	계속
	여성가족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계속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지원	계속
문화예술과 (5건)	문화체육관광부 (5건)	구.울주군청사 복합개발 사업내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속
		중부도서관 내생활문화 센터 조성	계속
		반다비 빙상장 내 생활문화 센터 조성	계속
		화정공원 어울림 문화센터 내 생활문화 센터 조성	계속
		명덕 생활문화 센터조성	계속
관광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신규
생태정원과	자 체	우리동네 정원 가꾸기	신규

□ 구군 추진사업 : 5개 구군, 7개 사업(자체 5개, 중앙부처 2개)

구군	자체/중앙부처	사 업 명	비고
중 구	자 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계속
남 구	자 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계속
동 구	자 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계속
	행정안전부	동구 마을관리소 조성사업	신규
북 구	자 체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계속
울주군	자 체	주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마을공동체 실현	계속
	행정안전부	배내골 마을공방 조성	계속

붙임2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 2023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단체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단체명(명)	해당동	사업명 (사업내용)	보조금
계		20개 단체(194)			85,780
1	튼튼한 이웃 만들기 (7개)	농소1동 주민소통 활성화 공동체	농소1동	웃음꽃 피워요 ■ 반려식물을 통한 어르신 우울감 해소 활동	2,000
2		아비브	농소1동	우리 동네 선배어른 마음읽기 ■ 예술활동을 통한 어르신 우울감 해소 활동	2,000
3		평온	농소2동	너도 나도 다같이 줍줍 ■ 중산초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과 플로깅 활동	2,000
4		가림	농소3동	우리 음식 알리기 ■ 농소3동 특산물과 전통음식을 접목한 로컬푸드 만들기	2,000
5		모두랑	효문동	소소한 일상 속에서 ■ 동네 사각지대 교통사고 방지활동	2,000
6		동동이	송정동	튼튼한 이웃만들기 ■ 반도유보라 주민 소통 활동	2,000
7		봉틀이 사랑방	양정동	봉틀이 원정대 ■ 재봉틀을 통한 양정동 주민 소통 활동	2,000
8	소소한 동네 만들기 (9개)	매곡공작소	농소2동	동화책놀이 ■ 엄마들의 동화책 놀이를 통한 공동육아	5,000
9		농이예술단	농소2동	농이마을미디어 프로젝트 2023 ■ 마을미디어전문가 양성 및 마을방송국 활성화	5,000
10		약수마을 교육공동체	농소2동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 약수마을 청화 및 기록 활동	5,000
11		이화캐슬	농소2동	이화내고향 ■ 이화마을 다문화가정과 소통활동	2,770
12		명상라이프	농소3동	명상을 통해 심을 회복해요 ■ 농소3동 명상재능기부를 통한 건강한 마을만들기	2,010
13		강동동 주민자치회	강동동	강동농수산물주말직거래장터 활성화 사업 ■ 강동주말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활동	5,000
14		송정동 여성회	송정동	송정 움직이는 놀이터2(마을 달리지) ■ 엄마들이 만드는 송정동 움직이는 놀이터	5,000
15		오치골 기자단	양정동	오치골 마을신문 만들기 ■ 소통활성화 및 마을알리기를 위한 마을신문 제작	5,000
16		두발 재사용	양정동	이웃주민이 자전거 수리하러 직접 찾아갑니다2 ■ 노년 자전거수리 재능기부 활동으로 자원재사용 도모	5,000
17	통통한 마을 만들기 (4개)	온맘	농소1동	마인드를 바꾸면 마을이 바뀐다 ■ 건강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활동	8,000
18		반려동물 신호등	농소2동	반려동물 신호등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만들기	8,000
19		농소2동 주민자치회 커뮤니티	농소2동	살기 좋은 농이만들기 ■ 마을문화콘텐츠 개발로 농소2동 유희공간 활성화	8,000
20		농소2동 아파트연합회	농소2동	2023 농소2동 주민과 함께하는 영화제 ■ 농소2동 아파트 주민 소통을 위한 영화제 추진	8,000

□ 2024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참여 단체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단체명(명)	해당동	사업내용	보조금
계		19개 단체(144)			92,000
1	든든한 이웃 만들기 (4개)	너를심다	농소2동	가족 소통 릴레이북 제작	1,000
2		소나기	송정동	환경공예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교육, 소통활동	2,000
3		탄탄클럽	강동동	퇴직자 탄소중립 프로그램	1,900
4		해봄	농소1동	공예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교육, 소통활동	2,000
5	소소한 동네 만들기 (10개)	봉틀이사랑방	양정동	재봉틀 재능기부 활동통한 주민 소통 활동	2,000
6		약수마을교육공동체	농소2동	부모교육, 환경정화 활동	3,800
7		라온별동무	농소2동	특수교육대상 아동 프로그램	4,000
8		나눠먹터작은도서관	송정동	공동육아, 교육, 행사, 전시회	4,750
9		크크크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 지도, 브랜딩	4,750
10		맘껏놀자	송정동	신도시 주부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5,000
11		북적북적작은도서관	농소2동	환경, 안전, 마음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5,000
12		바퀴달린꿈터	농소2동	발달장애교육 프로그램	5,480
13		신진여성나르샤	농소2동	경력단절여성 클래스	5,000
14		엄마의부캐	농소2동	육아플랫폼 개발	5,000
15	통통한 마을 만들기 (4개)	농소2아파트연합회	농소2동	아파트 영화제	7,580
16		농이마을미디어	농소2동	농이 아카이빙	7,580
17		반려동물신호등	농소1동	펫티켓 등 반려동물 관련 프로그램	7,580
18		농소2주민자치회	농소2동	먹거리 비즈니스 개발	7,580
19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매곡공작소	농소2동	돌봄 프로그램	10,000

인천일보

HOME · 지역뉴스 · 경기서부

안산동 주민자치회, '수봉이네 북적북적'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안산신문 기사 | 2024.07.24 14:41

구도심에 활력 불어넣기 위한 공동체 지원 공간



▲ 23일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주민자치회가 만든 커뮤니티 공간 '수봉이네 북적북적'에 개소식을 열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첫 번째 시도다.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 '수봉이네 북적북적'을 조성했다.

'수봉이네 북적북적'은 마을 캐릭터 '수봉이'의 이름을 딴 공간으로, 주민들이 북적북적한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민자치회가 공간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가 공간을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로,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활기를 잃어갈 것으로 우려되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첫 번째 시도다.

이 마을공동체는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 안산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돼 안산온 상록구 수암2길 15, 101호에 약 20평 규모의 사무실, 공유 오피스, 독립서점 등의 공간을 마련했다.

이 공간은 안산동 주민자치회, 수암산책,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1인 창업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를 지원한다.

또한 사정과 마을을 연계한 주말, 환경, 체험, 인권 등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도심 지역인 안산동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간 관리의 안산동의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10여년간 연구해온 공동체 '위암해스토리'가 맡았으며 공간 콘텐츠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안산에서 활동해온 5명의 청년들(산책프로젝트)이 전문성을 살려 운영한다.

특히 이들은 독립서점 '수암산책'을 통해 방문객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희 안산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으로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 많은 사례 학습을 할 수 있었다"며 "이 기회를 통해 안산동을 품어 넘치는 마을로 만들고자 현장 지원 센터도 유치하고, 청년 및 공동체들의 마을 활성화를 위한 실험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공간이 1호가 아니라 2호, 3호, 4호로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개소식에 참석한 이민근 안산시장장은 "주민들의 고민으로 조성된 이 공간이 안산동뿐만 아니라 25개 읍 면적으로 퍼져나가면 좋겠다"며 "이런 주민들의 노력에 시도 함께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전 수암동, 안산향교, 127년 된 안산초등학교 등이 있는 안산동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1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했으나 지금은 8000여 명으로 줄어든 인구소멸 위기 동네다.

광양시, 마을공동체 대표자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

핵개인과 시대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 대두 ... 마을공동체 발전방안 등 논의

기사입력시간 : 2024/07/15 [15:16:00]

윤진성 기자



▲ 광양시, 마을공동체 대표자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 개최

[더뉴스코리아=윤진성 기자] 광양시는 지난 7월 15일 마을공동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연대와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라실예술촌에서 실시한 워크숍에는 마을공동체 대표자와 마을 활동가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참석자 네트워킹, 광양시 마을공동체 소개, 마을공동체 발전방안 제시, 생활도자기 체험 순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워크숍 참여자들은 마을공동체 발전방안 등을 건의하며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한층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웃을 연결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마을공동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핵가족화를 넘어 핵개인과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마을공동체인데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6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마을공동체 48개소가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울산 첫 마을관리소 '행정센터 역할' 톡톡

조 오상민 기자 | 한승민 2024.02.23 06:10 | 7면

동구 화정마을관리소 운영
간단한 수리민원 등 처리
44개 공구 무상대여도 호응



▲ 20일 울산 동구 공무원 및 화정마을관리소 직원들이 관리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소한 동구 화정마을관리소가 '마을 관리실' '이동식 행정복지센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화정마을관리소는 지난해 12월29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 내 개소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관내 1인가구의 증가 및 노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의 대응책으로 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관리소에는 김기영(여·54) 사무원과 지킴이 김인중(63)·이항규(65) 반장이 상주하고 있다.

매일 오전에는 화정·일산동 일대 순찰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발굴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오후에도 구민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 찾아가 간단한 수리작업을 시행해 개소후 현재까지 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최근에는 인도변 가로수 경계석이 휘어지나와 노인들이 자주 넘어져 다친다는 민원을 접수해 이들이 직접 경계석을 보수하기도 했다.

특히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구 대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관리소 내 돗, 망치, 전동드릴 등 44가지의 공구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다. 장비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돼 하루 평균 3~4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항규 반장은 "매일 현장에 나가다보니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 현장에서 바로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며 "샤시를 수리할 비용이 없는 취약계층 가구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 수리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을관리소가 없는 나머지 동에서는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소규모 수리 △형광등 LED 교체 △세면대·싱크대 부속 교체 △긴급조치 등을 제공한다.

동구 관계자는 "해피콜 생활민원서비스가 마을관리소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권역별 마을관리소 개소가 목표"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 건설과 ※ 출처 : 국토연구원

1. 현황 및 분석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더라도 기온과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폭염일수, 1일 최대강수량, 상위 1% 극한강수일 등의 극한 기후지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1 현재 대비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기온 및 강수 변화

전국	현재	단기(2021~2040)		중기(2041~2060)		장기(2081~2100)	
		SSP1-2.6	SSP5-8.5	SSP1-2.6	SSP5-8.5	SSP1-2.6	SSP5-8.5
평균 기온(℃)	11.9	+1.3	+1.5	+1.6	+2.9	+2.3	+6.3
평균 강수량(%)	-	+2.9	-0.7	+4.6	+6.6	+3.4	+18.3
강수일수(일)	110.9	-9.0	-7.4	-7.0	-5.5	-6.0	-5.6

주: SSPx-y 형식에서 SSP1은 친환경적인 성장, SSP2는 완화-적응의 중도성장, SSP3는 기후변화 취약성장, SSP5는 화석연료에 의존한 고속성장을 뜻하며, y는 2100년 기준의 복사 강제력을 의미(IPCC 2021).

자료: 이종소 외 2023, 2의 <표 1>, 국립기상과학원 2021, 20, 23의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24년 감사원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조사결과 도심지 침수, 댐 월류(물 넘침), 교량 붕괴, 항만 침수 등 재해 발생 위험이 정부의 예측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313개의 교량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 증가에 따라 침식에 의한 손상 발생 위험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됨.
 -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 지자체 등이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위보다 교량의 여유고(교량 상판의 하부와 계획홍수위 사이의 높이)가 충분히 높아야 하고, 구조물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인 세굴 방지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아 교량 붕괴 발생위험과 월류 발생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감사원은 미래 기후위기로 인한 교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천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

The flowchart illustrates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bridges, categorized into two main paths: increased precipitation and increased temperature.

-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leads to:
 - Increased Precipitation (강수량 증가)** (Increased frequency and intensity of heavy rain) → **Increased Load on Bridges (하천이 부담하는 홍수량 증가)** →
 - Increased Flood Discharge (하천유량의 유속 증가)** and **Increased Flood Level (홍수위 상승)** → **When Flood Discharge Exceeds Capacity (하천 횡단 교량의 경우)** →
 - Direct Flood Damage (직접적 붕괴 위험 가중)**:
 - Severe Damage (세굴 심화)
 - Excess Load and Space Shortage (교량의 여유고 및 공간장 부족 등)
 - Temperature Increase (온도 상승)** (Heatwave frequency) → **Bridge Expansion and Contraction (교량상판 포장 및 이음 영향)** →
 - Decreased Usability and Functionality (사용성 및 기능성 저하)**:
 - Cracking (상판도로 파임)
 - Joint Settlement (신축이음 솟음)
 - Expansion Settlement (포장 솟음 등)

- 하천교량 유지관리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유지관리 단계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등에서 하천교량의 붕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여유고와 경간장³⁾ 등 주요 요소를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성능평가의 경우 일부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음.

교량구분	1종	2종	3종
대상범위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 구조물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 교량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

-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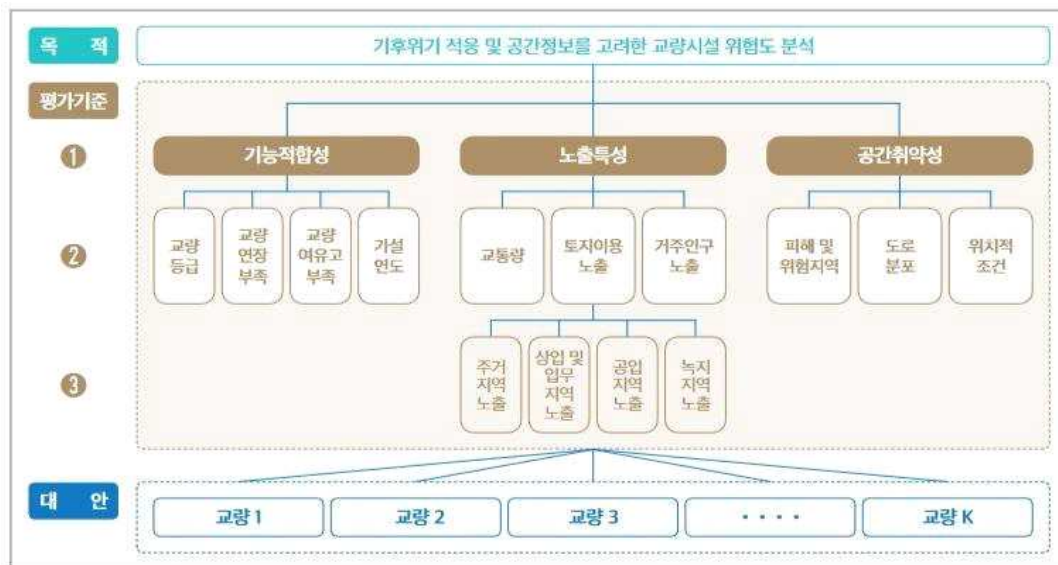
표 2 종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1종	대상	대상	대상	일부 대상
2종	대상	대상	-	일부 대상
3종	대상	필요시	-	-
기타	미관리대상	-	-	-

주: 1, 2, 3종은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
 자료: 이종소 외 2023, 6의 <표 6>.

2. 시사점 및 제언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와 PROMETHEE(Preference Ranking Organization Method for Enrichment Evaluation)를 연계한 하천 교량의 위험성 분석 방법 개발
 - 기능적합성, 노출특성, 공간취약성 등 평가기준으로 교량의 여유고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



- 시설의 종과 무관하게 안전 여부를 검토하도록 대상시설을 선별하여 정밀안전 점검 진단과 성능평가를 확대 적용

표 3 종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대상시설 확대(안)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기존	개선(안)	기존	확대(안)	기존	확대(안)	기존	확대(안)
1종	대상	작동	대상	작동	대상	작동	일부 대상	대상(확대)
2종	대상	작동	대상	작동	-	일부 확대	일부 대상	대상(확대)
3종	대상	작동	필요시	필요시 + 일부 확대	-	일부 확대	-	일부 확대

주: 1, 2, 3종은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
 자료: 이종소 외 2023, 6의 <표 6>을 일부 수정.

- ☞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하천횡단교량의 선별) 홍수로 인한 붕괴 시 주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을 위험성 분석으로 선별하여 정밀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을 확대
- ☞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에 있어 홍수 취약성 진단)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는 여유고, 경간장 등을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기후위기에 대비
- ☞ (성능개선사업 우선순위 도출) 위험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
- ☞ (관련 제도 개선근거 마련)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하여 하천교량 유지 관리 및 기후위기 적응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

의정활동 착안사항

☞ 미래 기후요인 반영한 교량 안전 점검 필요

: 지역 내 교량과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한 구조물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하천관리 정책 수립 시 선제적인 대응 필요

: 과거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래 기후변화 예측 모델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방적 투자와 관리 필요

大田日報

2024년 07월 11일
02면 (사회)



10일 새벽 대전 지역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중구 유등동 유등교에 균열이 생겨 교통 전면 통제 등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물 폭탄’ 맞은 대전

유등교 침하에 교각 내려앉아

10일 새벽 대전에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불어나 유등천 유등교가 침하했다.

유등교 교각이 내려앉은 것은 이날 오전 8시쯤으로, 다리 통행이 전면 금지돼 출근길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

왕복 8차선 다리의 중간 부분은 교량 상판이 들려 가운데가 주저앉은 V자 모양으로 변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며 다리 교각이 유속과 유량을 견디지 못해 기울어지고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구 용촌동 마을 2곳에는 비로 인해 물이 차올라 27가구가 침수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재민 36명이 발생해 인근 복지관으로 몸을 피한 상태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유

출 등 피해가 잇따랐다.

또 유등천뿐만 아니라 대전천과 갑천 등 대전 3대 하천이 범람 직전까지 가면서 대부분 통행이 통제됐다.

대전시는 일부 구간이 주저앉은 유등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 추후 보수·보강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유등천 수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야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보수·보강 일정은 정밀안전진단 진행 이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와 대전경찰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등교의 교통 통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유등교 보수·보강 예산은 시 재난기금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침하 원인은 정밀안전진단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 2024년 7월 10일 대전에 내린 폭우로 ‘유등교’ 교각이 내려앉았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통행 중단으로 인한 극심한 교통정체 등이 발생하고 있음. ‘유등교’는 2023년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은 바 있음.

大田日報

2024년 07월 12일
02면 (종합)

무너진 유등교 정기안전점검은 ‘이상무’... 실효성 논란

폭우로 침하... 지난해 점검서 결함 발견 안돼 점검 방식 개선·모든 교량 전수조사 필요성도

10일 새벽 내린 폭우로 침하한 대전 유등교 유등교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교량 정기안전점검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54대를 맞은 노후 시설물인 유등교는 안전점검을 진행했음에도 이 같은 불상사를 막지 못한 만큼 한층 점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유등교를 포함한 지역 내 교량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해 나온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시간당 최대 강수량 48.5mm에 달하는 폭우로 중구 유등동과 서구 도마동을 연결하는 유등교 교량 일부에 침하 현상이 발생, 도로 일부가 가려 있었다. 시는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양방향 통행을 제한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수 및 보강에 나설 예정이다.

유등교는 1970년 12월 준공된 왕복 8차선 교량이다. 준공 50년을 훌쩍 넘긴 노후 시설물이지만, 이전까지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특별한 결함은 발견하지 않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통상 시설물 안전 점검은 연별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시내 전체 교량은 197곳으로, 정기 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등교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 확인검사 등을 실시한 상태였고, 그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등교는 지난 시간 내린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가라앉으면서 교량이 열

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침하 원인으로 교각 2개의 하부 세굴로 상판이 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전점검이 진행됐음에도 폭우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하는 등 안전점검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점검 당시 세부적인 결함을 가려내는 등 심도 있게 문제점을 가려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손민우 충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기 검사에서 세부적인 결함은 제대로 발견해내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 정기교량 본과 사고 이후 현장 교량 점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현장에 안착되기는 예산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 극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시내 다른 교량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



폭우가 자-42 11일 오후 중구유등동 유등교 한 보행교에 파손된 수목이 교량을 쓰러지려는 위험이 있다. 김영태 기자

물관리기본법

제18조(기후변화 대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취약성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물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 3.>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Ⅲ. 타 지자체 입법 동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교통행정과

1.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4조)
- 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제5조)
- 다.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교통비 등 지원(제7조)

3. 입법 시사점

- 가. 최근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2024. 7. 1. 발생)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음. 울산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2021년 489건, 2022년 573건, 2023년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운전면허 자진반납률은 지난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4위에 해당하는 1.7%를 기록해, 전국 평균 수준(2.4%)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진반납률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10~30만 원 수준의 교통카드, 지역화폐,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경기도 파주시의 경우 65~74세는 현행 그대로 10만 원을 지급하되, 올해부터 75세 이상 반납자에게는 30만 원으로 지급금액을 상향하여 올 상반기 반납자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다. 울산의 경우, 울산시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시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반납 수요에 비해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라. 이에 따라 자체 지원 사업을 검토하거나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한
북구 맞춤형 유인책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서울시 강남구가 시 차원의 사업과는 별도로
오는 9월부터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2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것(중복 지원 안됨)과 같은 특정 연령대에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오히려 반납률을 낮추는 역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납률 증가’에 중점을 두고 다각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4. 5.]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582호, 2024. 4. 5.,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 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타 지자체 현황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지자체 현황

울산 중구·동구·남구, 경기 파주시, 서울 강남구 등 164곳

※ 울산시의 경우,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6조2에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였음.

IV. 참고 법제정보

<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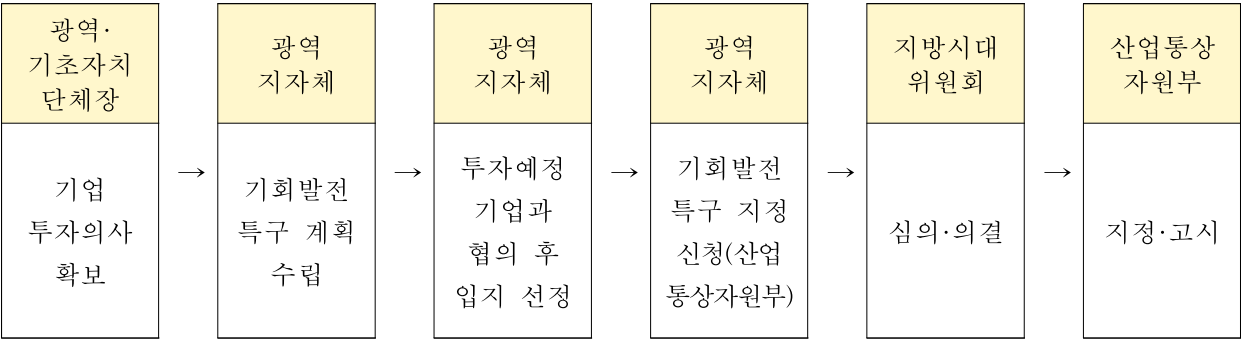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

※ 기획예산실 ※ 출처 : NARS 입법정책

☞ 울산시는 2024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음 (2024. 6. 20. 울산시 보도자료).

1. 기회발전특구의 도입 배경 및 지원 체계

-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한 목적으로,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함.
-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요구에 맞게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며, 시·도지사가 중앙정부로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역할을 함.



<기회발전특구 지정 절차>

- 2024년 6월 20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8개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됨.

○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세제 지원	소득세·법인세	-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세·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세·법인세 감면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지방세	특구 내 기업 창업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본점·주사무소 공장 이전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 감면
		특구 내 공장 신·증설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100% 감면	
재정 금융 지원	지역균특회계	- 지역자율계정 확대를 통해 특구 인프라 확충 등 지원	
	기회발전특구 펀드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펀드 조성 - 10년 이상 투자시 9% 분리 과세	
	저리 금융	- 저리 융자 상품개발을 통한 특구 기업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지원비율 5%p 가산, 기업당 국비지원 한도 100억원 → 200억원)	
규제 특례	규제혁신	- 규제혁신 3중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	
	규제 특례	- 지자체가 규제 특례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가 규제 특례 부여	
정주 여건 개선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10%)	
	주택 양도세	-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교 설립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우대	

2. 해외 주요국의 특구와 조세 감면

○ 미국의 기회특구

- 우리나라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반면, 미국의 기회특구(저소득 낙후지역)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 ‘민간투자자’에게 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

- 민간투자자는 펀드상품인 ‘적격기회펀드(Qualified Opportunity Fund)’를 통해 기획특구에 투자하고 조세 감면을 받으며, 이때 수익(양도차익)에 대한 조세까지 감면해 준다는 특징이 있음. 다만, 펀드 투자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적격기회펀드는 수익성이 높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투자하는 경우가 매우 부족하였음.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예산 투입이 아닌 조세 감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특징이 있음. 일본은 총리가 주도하도록 설계해 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갖지만, 특구 안에서의 사업 제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함.
-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창업하기 쉬운 국가”를 목표로 국제적인 경제 활동의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 시작되어 대도시권에도 특구가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방소멸 위기대응,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도입하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등에 특구를 지정한다는 차이가 있음.

3. 쟁점사항

○ 지방세 감면의 차별성 부족

- 우리나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거의 유사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심의 감면

- 미국,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창업, 이전, 공장 신·증설 등으로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한정적임.

○ 지방세 감면의 업종 제한

- 기회발전특구에서 지방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지방세 감면의 업종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부적절하지 않지만, 업종 제한에 따라 정책 수혜 대상이 축소되고 지방세 감면의 파급효과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의 구체성 미흡

-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11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해 기회발전특구의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함.
-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 및 규모를 보면 지역자율계정의 금액이 크게 증액되지 않아서(2023년 2.4조 원, 2024년 3.1조 원) 지역자율계정을 확대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된 명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임.

○ 기금 등의 활용 부족

- 2024년 6월 기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중앙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등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민간자본을 활용해 지역의 거점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원을 기회발전특구에 활용할 계획이 부재함.

4. 재정 지원 관련 개선방안

○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

-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근로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민간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절차와 요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확하게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지방세 감면 업종 추가

- 현재 지방세 감면 업종 이외에,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친환경 업종을 지방세 감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친환경 에너지 산업, 스마트 농업 및 식품 산업, 친환경 건축 및 재생 건축산업, 순환경제 산업, 생태 관광사업, 친환경 교통사업,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업 등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구체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회발전특구 지원과 관련된 새로운 계정을 신설하거나 지역자율계정의 총액 규모를 현재의 3.1조 원에서 확대하거나, 지역자율계정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 기금 등의 재원 활용 방안 마련

-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지원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에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재원의 사용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임.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관련)

(안건번호 의견23-0345)

1. 질의 요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 회신 내용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판결 참조).

이 사안은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서는 지방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공사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정관 변경 절차를 추가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조례가 상위법령의 효력을 좌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참조). 그런데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지방공사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7. 8. 의견제시 21-0179 참조).

나아가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나 위임 규정 없이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1조에 따라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운영상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3. 4. 28. 의견제시 23-0083 참조).

따라서 지방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V. 자치법규 Q&A

Q. 특정 내용에 대해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나요?

A. 조례에 규정할 내용이 수익적 내용이면 가능할 수 있으나,
침익적 내용이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수익적 내용이면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 않으면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침익적 내용이면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에서만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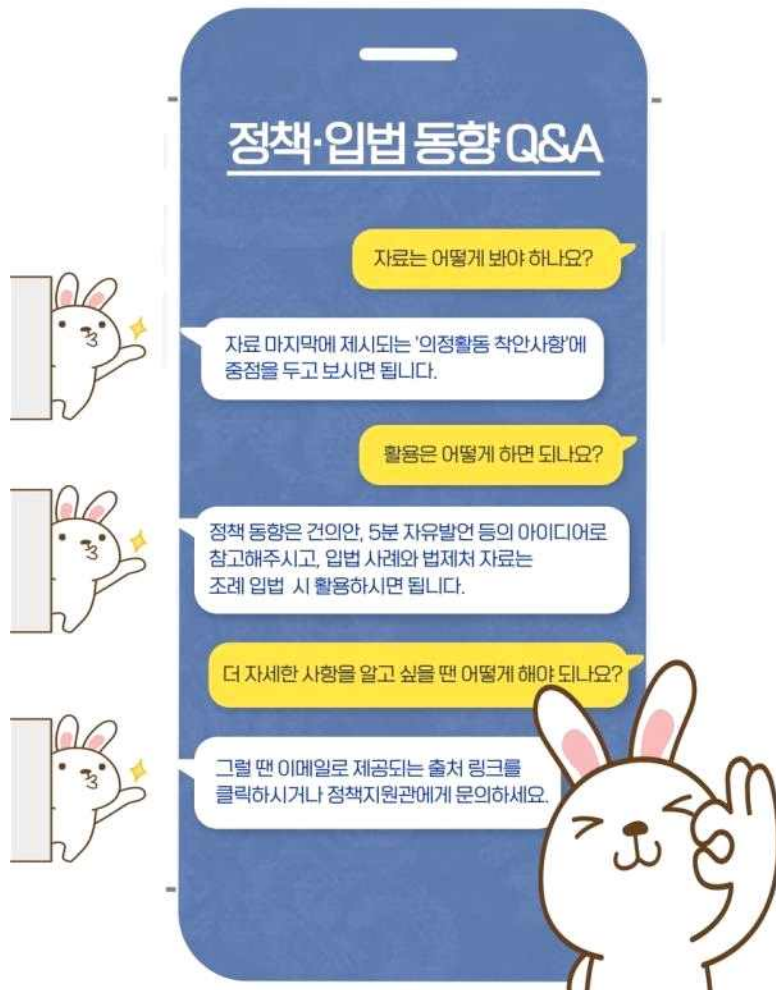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의견제시 사례 >

해당 규정이 비록 권고의 형식이어서 이행 여부를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사업주의 의사에 맡겨둔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의 영업신고 수리, 행정제재 등 영업 관련 권한을 가진 구청장이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여 그 모니터단을 통하여 권고사항을 지도·점검한다면 이러한 구청장의 의사표시는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사실상의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순수한 의미의 행정지도로 보아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제처 2013. 7. 22. 회신 13-0213 의견제시 사례)



정책 · 입법 동향(2024년 8월, 제9호)

발 행 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발 행 일 : 2024. 8. 29.